

청년대선클램프 정책제안

청년대선클램프의 정책목표는 청년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란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그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소득이 있어야하고,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투표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현재 투표권은 청년들에게 나이라는 생물학적변화가 발생하면 주어지는 것으로,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연대하며 공동의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전무하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나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전제 때문에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주권자의 자격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자로서의 자격이 배제된 이들은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등이 겪고 있는 문제는 청년들이 지금 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같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은, 생물학적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살아가기 힘든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청년세대 내부의 변화만으로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청년의제의 역설이 발생한다.

이에, 청년대선클램프의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예컨대, 안정된 수입과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② 단순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 즉 생태적인 삶, 여유 있는 삶,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③ 이를 위한 자원은 생태를 파괴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부를 재전유하고 투기불로소득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 ④ 투기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는 모든 배제된 이들과 연대하여 이들이 정치적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변화, 즉 더 많은 민주주의 배제된 자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한다.

1. 자립하는 삶.

현재 청년들은 임금노동자가 되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으며, 등록금과 각종 자격증 획득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홀로감당하고 있다. 더불어 지금 학업을 포기하고 노동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 때문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저임금과 나쁜 노동조건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적인 학습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더구나 일자리부족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장기실업상태, 낮은 임금과

높은 주거비 등은 이 기간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개인의 부채로 해결하게 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청년의 자립, 나아가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들이 안정된 소득과 주거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노동을 통한 소득을 인상한다. 평균 월 40~50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토지세 부과 등을 통한 불로소득환수로 부동산가격자체를 내리고 토지의 공공화를 진행하면서 해결한다. 그리고 가게와 개인의 엄청난 부채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획득한 금융자본에 철퇴를 가하고 개인부채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자납부액을 원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학자금부채를 탕감, 미래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의 조건을 마련한다.

1) 1시간 일하고 밥과 커피를 먹자 - 최저임금 1만원으로!

2) 공부와 연애는 나의 집에서! - 부동산투기소득환수로 우리에게 집을!

3) 빛이 아닌 빛나는 삶 - 이자납부액을 원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학자금대출 부채 탕감.

2. 여유 있는 삶.

불안한 노동시장과 생존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청년계층은 자신의 미래와 삶에 대해 충분히 사유하거나 꿈꿀 수 없고, 쌍용자동차 23명의 죽음과 청년 자살율 1위에서 보듯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보장뿐만 아니라 삶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물질적 전제이기도하며, 더 많은 민주주의와 참여적, 능동적 민주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에 전국민 안식년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교수들처럼 5년을 일하면 1년을 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설계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개인이 다양한 부문과 영역에서의 활동을 사유하고 도전함으로써, 경제의 생태다양성과 창의성을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2년 뒤 해고라는 불안함속에서 살아가야하는 불안정노동체제의 핵심인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마찬가지로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여유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보다 건강한 삶, 다양한 삶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보장한다.

1) 숨 좀 쉬면서 살자 - 전국민 안식년제도.

2) 불안정한 삶은 이제 안녕 - 비정규직 철폐! 청년기본소득

3) 아프면 병원가고, 공부하고 싶을 때 학교가자! -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의료와 교육받을 권리 보장.

3. 평화로운 삶.

병역제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들이 필요하다. 우선 징병의 주체는 국가이며 따라서 남성과 여성,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 주권자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병역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6.25 전쟁이후 형성된 53년 체제, 즉 평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병역문제는 큰 방향에서 평화를 지향하고, 공동체의 의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다른 국민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권리를 획득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사회부문에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한다. 두 번째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징병제는 축소되어야 한다.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군 복무기간동안의 노동에 대한 권리는 보장한다. 병역의무와 노동의 권리를 분리하여, 군대가 청년들의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기간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서 복무하는 기간이 되도록 한다.

1) 평화로운 의무!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사회복무제도로의 전환

2) 군대를 바꾸자 - 군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군인최저임금지급

4. 소통하는 삶.

SNS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 등 통신기술이 진보하면서 기기를 매개로 한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핸드폰 SNS 등의 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사회적 관계맺기의 전제조건이 됐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통신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와 통신분야에서 경제적 소득에 따른 접근권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으며, 통신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 관계맺기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3개 통신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핸드폰요금을 기본요금 폐지, 문자무료화 등을 통해 즉각 인하한다. 또 모든 와이파이를 개방, 통신이 토지처럼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부여한다. 더불어, 무상대중교통을 실시하여 생태적인 이동과 소통을 유도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이동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기본권인 이동할 권리를 보장한다.

1) 통신사 말고 우리의 소통을 보장하라! - 반값핸드폰비와 모든와이파이 개방

2) 돈 없어도 움직일 수는 있어야 - 무상대중교통실시

5. 함께하는 삶.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또한 사랑의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배제 당한다.

다양한 정체성과 삶에 대한 인정은 곧 모든 이들의 삶을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나와 공동체를 풍부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인간사회의 관계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역시 중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라는 믿음을 통해 자연을 착취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주의는 토건족과 개발관료들에게 낙수효과를 주었고, 추위와 더위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왔다. 자연에 대한 토건족과 관료들의 태도야 말로 '이득은 사적으로 취하면서 피해는 사회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좀 더 건강한 삶,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태적인 삶을 원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대학의제는 흔히 등록금의 문제로만 이야기되었지만, 대학과 공동체의 관계, 대학과 배움의 내용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대학은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고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대학이 인력양성소의 기능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모든 이들과 공유하는 보편적이고 공동체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반자 등록법을 통해 동성애와 동거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국가지원을 통해 미혼모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또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부터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생태세부과로 대안에너지개발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학력과 상관없이 평생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 내용적 의미에서의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1) 성적다양성과 다양한 사랑을 인정하자 - 동반자 등록법으로 동성애와 동거인, 미혼모등의 권리보장

2) 생태적 삶을 살고 싶다 - 탈핵, 생태세 부과 등으로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

3) 지역공동체와 함께 배우자 - 대학 도서관 개방과 평생교육제도 제공,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6. 배우는 삶.

한국은 기형적으로 사립대학 비율이 높고, 대학교육자율화이후 등록금과 교육내용이 사립대학과 기업의 입맛에 맞게 바뀌었다. 반값등록금은 지금 당장 대학생들과 부모들의 생활비경감의 효과가 있지만, 국가재정투입에 따른 대학의

내용적 경제적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찾기 힘들다. 이에 국가재정투입을 통해 일부 사립대학과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을 국립대로 전환하고, 위의 대학개방과 같은 조치를 통해 경제적 의미에서만 아니라 내용적 의미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한다.

매년 수능 날만 되면 청소년들의 자살소식이 뉴스를 장식한다. 학벌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로, 노동시장에서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 학벌 축적 경쟁이 벌어진다. 정책 1, 2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한편,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로 학벌의 영향을 축소,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막대한 사교육비 경감을 유도한다.

더불어 현재의 초, 중, 고와 대학에서의 비정규직 교원은 양질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들의 고용과 연구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여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게 한다.

- 1) 법인화 말고 공립화 하자 - 등록금철폐를 통해 일부 사립대와 부실대학 국립대화.
- 2) 수능날 자살 소식 좀 안 나오게 해라 - 국공립대학네트워크 형성하여 학벌철폐, 입시 제도개혁
- 3) 콩나물교실과 불안한 선생님으로부터 벗어나자 - 학교비정규직 철폐와 확보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20명이내로 제한.

결론

정책 1,2를 통해 청년들의 불안정노동체제를 종식하고,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는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와 연대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것은 기존 청년정책과 청년정치의 한계였던 시혜적이고 물질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존정당의 비례대표로서, 불쌍한 청년계층을 상징화시키고 청년의제를 소비니즘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청년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립하는 힘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여유를 바탕으로 청년층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들의 정치적 주체화는 기존정당의 자원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써 집단적인 관계맺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획득과 사회의 재구성은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구조의 해체를 통해서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제된 자들의 연대가 필수적이며, 청년계층에만 한정된 정책대안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이해관계에 일치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개별 국민들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고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보수정당의 청년정책들이 성장주의를

전제하고 계량 가능한 물질적 조건을 청년계층에게만 배타적이고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론적으로 청년대선클럽의 정책은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는 현재의 양적성장과 경쟁위주의 사회의 전환과 그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과 자연, 가치들을 복원하고 이들 배제된 이들이 정치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닥치고 정치'가 아니라 닥치고 정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적 과제다.